

# 2001년을 에너지절약 운동 붐 조성의 시기로!

(에너지 시민연대 2001년 사업계획)



최승국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MNETNG@chollian.net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다. 20년 만에 맞은 고유가 파동으로 국가적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시민들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앞서 전국의 15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6월 에너지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상설연대기구인 '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결성하였고 현재 참여단체가 240개로 확대되었다.

에너지연대는 지난 한해동안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운동과 여름철 냉방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인 안티에어컨 캠페인, 고유가 대응 활동,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다양한 실천활동들과 정책포럼 운영과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창립 첫 해의 활동을 바탕으로 2001년에는 본격적인 에너지절약 운동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지난 3월 19일 열린 정기총회(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참가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결의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연대는 금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연대에서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 측면은 에너지연대의 창립 동기이기도 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의 추진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에 동시에 진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먼저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에너지관련 법과 제도 개선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행 에너지관련 법이나 제도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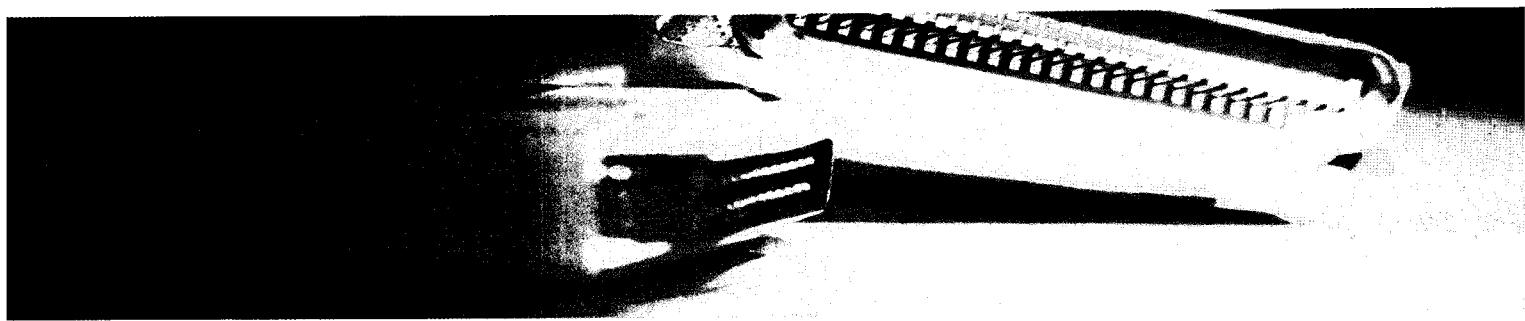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델파이 조사 등 각종 기법을 동원하여 현행 법규나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 검토한 후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검증을 거친 후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조례 제정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연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으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에너지조례를 만드는 작업과 함께 환경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지역에너지 조례는 지역내의 에너지 시설을 절전형(효율화 제품)으로 바꾸고 건물 신축시 그린빌딩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며,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유치제한, 발전시설에 대한 합의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운동은 2001년 상반기 중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범안을 만들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조례제정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조례안을 작성한 후 금년중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며, 하반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각 5곳 정도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조례 제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조례가 만들어지면 에너지절약 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운동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사업중 세 번째 영역은 '대안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운동이다. 대안에너지 보급은 금년 산업자원부의 대통령 중점 보고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운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대안에너지(정부 표현으로는 대체에너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확신이나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고 여전히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무게를



낮게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에너지라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며,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자원의 고갈, 그리고 체르노빌 핵사고로 견증된 원자력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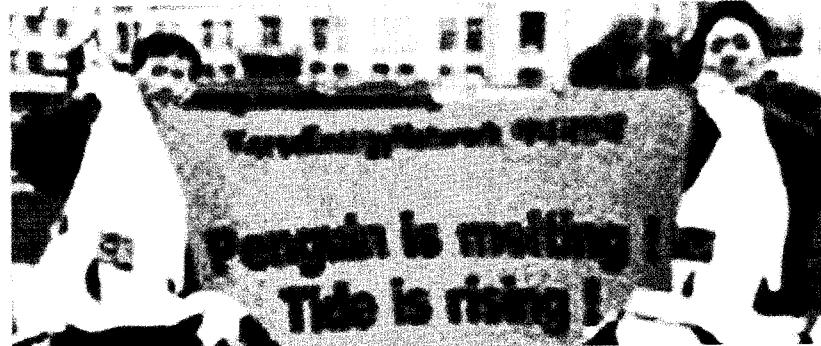
이에 에너지연대는 한국에서 대안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이용실태, 인센티브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재생가능에너지 가격 현실화, 재생가능에너지 의무구매 제도 도입,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대안에너지 제안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금년 6월 제주에서 열리는 태양광발전 국제회의에서 NGO 토론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확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사업의 네 번째 분야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는 이제 우리사회가 짚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로써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그에는 가운데 하나뿐인 지구는 점점 돌아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에너지연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후포럼을 구성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대국민 홍보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국제 NGO들과 협력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7월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총회(COP6) 속개회의 및 11월 말라카쉬에서 열리는 COP7에 참여하여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꾸준히 국내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화 제품 사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다섯째 분야는 '에너지 효율화 확대 운동'이다. 이는 실천사업과도 연계하여 진행할 것인데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품의 소비 및 사용 실태조사와 에너지 효율제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이 중 효율등급 표시가 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등급표시 확대 건의 및 기존 효율등급 표시제품 중 등급표시가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활동들도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제품 사용실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기관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제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고효율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꾸준히 촉구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

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듯이 고효율 제품에 일정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참여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미래 에너지 지표의 적정성 분석, 지역 및 도시차원의 저에너지 전략수립 방향, 에너지 가격 모니터 및 방향제시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정부에 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실천사업분야를 살펴보자. 에너지연대는 이 운동을 범국민적 봄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과 수송분야 에너지절약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은 에너지연대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운동은 100만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난방에너지 등)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운동을 위해 해당 주체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이미 지난해 마련하였으며 일반시민들이 이 운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연대 홈페이지([www.enet.or.kr](http://www.enet.or.kr))에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언론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봄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연대는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100만가구운동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운동의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13일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 공동 추진을 위한 조인식'을 서울시장과 에너지연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서울에서만 30만가구를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는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새서울뉴스, 반상회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100만가구 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통방송과 협조하여 본 운동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522개 모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타)에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 접수창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 등 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참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포항시, 군산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가구가 3만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까지 1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는 이 운동의 형식을 다양화하여 참여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봄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언론과 연계하여 단계별 운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이 운동이 에너지절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운동의 참여자를 2002년에는 30만명으로, 그리고 목표연도인 2003년에는 실제적으로 100만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으로서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연대는 이 운동을 통해 2003년까지 가정용 에너지사용량의 10%를 절감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송 및 산업부문 등 다른 부분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운동의 주체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환경친화적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실천사업으로 100만가구운동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 '수송분야 에너지 절약운동'이



다. 수송에너지는 절약 잠재량이 가장 큰 부분이고 정부의 정책 및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 되기에 이 부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에너지연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수송에너지 절약운동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하나는 현재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전거 다시타기' 캠페인이 다.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수송부분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며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필자가 지난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네덜란드에 갔을 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의 자전거 보관소와 편도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할애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 적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북 상주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에너지연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전거 기행 등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범국민적인 자전거 이용 봄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의 두 번째 사업은 '공회전 줄이기 운동'이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한 해 3,735억 원의 에너지 낭비와 6,135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차량이 많이 모이는 버스 차고지, 고속버스 휴게소, 물류 센터 등에서의 공회전이 심각한데 에너지연대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공회전 실태조사,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국민 공회전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송에너지 절약운동의 세 번째 사업은 '차 없는 날(Car-free day) 행사'이다. 이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



획한 캠페인성 행사인데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유

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은 매년 9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 세계적인 연대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차 없는 거리(서울 광화문 네거리 등)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이는 단지 수백미터의 길을 막고 그 안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쳐 Car-free day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연대는 금년 9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해 서울 4대문안 등을 지정하여 자가용 출입금지,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수송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연대는 이와 같은 정책사업과 실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사업으로는 교사용 교수지도안, 시청각 교재 등 교육용 자료제작과 함께 '에너지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홍보활동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냉·난방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특히 첨두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어컨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한 '안티에어컨' 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높여 추가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줄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홍겹게 어울려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문제를 주제로 한 마당극을 제작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할 것이다.

에너지연대는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2001년을 에너지절약 운동의 큰 봄을 조성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끼고 생활속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큰 물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